

국내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동향 분석과 제언

정명선*, 이경준**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최근 2012년 상반기까지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를 다룬 국내학술지 60개 중에서 총 95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대상, 발표연도, 연구자 수의 분석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국내의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는 연구주제가 11가지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 법률 및 정책이 71.6%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연구주제와 맞물려 연구유형 역시 6가지 범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 문헌연구가 81.3%를 차지하였다. 장애와 관련된 다른 연구나 실제 환경적 맥락은 개별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의 대상은 18가지 분류 중 일반장애인이 55.8%를 차지하면서 각 장애대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장애인 인권에 관한 전반적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데 기여했기에 반드시 회의적으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으며, 다만 앞으로 인권실천현장의 대상이 보다 폭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가 더욱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연구물의 수는 연구주제 및 연구유형의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각종 법제의 등장과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연구자의 수는 5가지 분류 중에서 1인 단독이 71.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다학제적인 최근 연구경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장애인 인권관련 국내연구는 이제 법률 및 제도의 비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권교육에서부터 실천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성과 조화를 추구하고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로 판단된다.

주제어: 장애인, 인권, 연구동향, 장애인 인권위기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사회적 위기들 중에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내지 취약계층의 삶과 관계된 불평등하고 비사회적인 문제들이 다수 공존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래 언론매체의 주류를 이루며

* 제1저자, ** 교신저자.

극악성을 보이고 있는 아동 및 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들이나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문제, 이제는 그저 일반화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버린 듯한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과 억압 등이 바로 그 예일 것이다. 이 문제들은 단편적인 인적, 물리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사회정책적 그리고 사회인식적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위협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나 가족의 원활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전제라 할 수 있는 ‘인간다운’ 권리와 존엄이 무시되고 편견과 차별과 같은 사회적 억압요소들이 작용하면서 그들 삶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곧 ‘인권’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며, 동시에 그들의 ‘인간다운’에 대한 요구와 존엄성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이고도 중대한 인식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보편적으로 ‘인권’이라 함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은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 독립 등에 대한 권한을 행하는 출발점으로서 표현 그대로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부터의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인권은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은 삶의 어떤 특정분야에 국한한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든 삶의 전반에서 기본적으로 인식되고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이경준, 2011). 이와 같은 보편적 인권의식과 확산은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위협과 그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인권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로 인해 생활전반에서 각종 사회적 장벽과 불리, 그에 따른 차별을 겪음으로써 원활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에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장애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인권의 문제는 생활전반에서의 위기극복과 함께 궁극적인 삶의 질에 직결되며, 사회적인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도 상통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장애계의 다양한 정책 환경 변화를 주시한다면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향상이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사회통합, 정상화, 자립생활과 같은 장애인복지의 핵심이념 확대와 함께 전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통해서 전반적 장애인복지의 시행이 이루어진 이래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과 자립지원을 명기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2007), 일상생활뿐 아니라 직업, 교육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의 장애인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2008), 의무교육확대나 평생교육지원 등 교육권보장 강화를 명기한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 시행(2008), 그리고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2011)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2012) 등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자립과 사회통합원조 방안들이 꾸준히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정책적 환경변화는 바로 장애인으로서의 인권과 평등이념을 기반으로 하면서 장애당사자들의 사회적 위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및 지원체계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역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 정책이나 법률분야에서의 변화와 이행에 대한 다수의 합의연구를 비롯해서 실천현장에서의 인권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1990년대 초중반을 시작으로 200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장애인 인권연구들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들이 과연 어떠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속에서 어떠한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면서 진행되어 왔는지 등을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장애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적 방향성이나 실질적 논의점 등을 객관적으로 제안하는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계 패러다임 변화의 본질이자 동인으로서의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동향 파악은 학술적 측면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성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생활전반에서의 위기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들의 인권적 현실을 인식하며 개인 및 사회적 예방과 대처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권 보장의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보다 성숙한 인권담론의 형성과 그들의 위기상황으로서의 재난을 예방·치유할 수 있는 사회적 위기 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논의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확보를 위한 본질적 접근으로서의 인권관련 연구의 전반적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장애인 인권연구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사회 위기로서의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과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를 그 의의로 추구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1993년부터 최근 2012년 상반기까지의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국내 연구논문들의 연구주제의 경향은 어떠한가?
- 둘째,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국내 연구논문들의 연구유형의 경향은 어떠한가?
- 셋째,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국내 연구논문들의 연구대상의 경향은 어떠한가?
- 넷째,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국내 연구논문들의 발표연도별 연구물 수의 경향은 어떠한가?
- 다섯째,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국내 연구논문들의 연구자 수의 경향은 어떠한가?

II. 장애관련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

장애관련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핵심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러한 관점에 따라 장애 인식의 수준과 정도 그리고 실제 사회적 양상이 보다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장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 즉 ‘장애인’에 대한 관점과 인식은 다양했으나,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함께 변화해왔다. 그중에서도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려운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바라봄’은 대표적으로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자) 또는 요보호(자) 등의 개념일 것이다. 즉, 손상이 곧 장애라는 의학적 관점이 주를 이루고, 개인적인 불행의 문제였으며, 그렇기에 시설수용 등을 통한 우선적 분리와 통제 그리고 전문가적 조치로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던 시대의 일이다. 이러한 경향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1980년도 장애개념 모델(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WHO, 1980)은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상으로 일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의 현상을 1차적 손상(impairment), 즉 신체적 차원의 기능장애와 그로 인한 개인적 차원의 2차적 능력 장애(disability), 그에 이어 3차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불리(social handicap)로 설명하면서 영향의 일방향성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97년의 장애개념 모델(ICIDH-2)을 통해서도 확실한 변화를 확인하게 된다. 즉, 장애를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신체적 기능과 구조상의 손상이 활동제한(activity)이나 참여제한(participation)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상황적 요인들(contextual factors)에 의해서도 장애의 발생과 진행은 그 자체적으로 가능하며 어떤 관계로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WHO, 1997). 그리고 이 개념은 2001년도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모델로 변화·발전하면서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을 시도하고, 상황적 요인들과의 역동성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개념체계를 좀 더 구체화하였다(WHO, 2001).

이러한 시대적 과정을 통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관점과 인식 또한 전후 1960년대까지의 보호나 관리중심에서 서서히 1990년대 초반까지의 교육 및 재활측면에서의 후원이나 복지지원 중심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 동등한 시민권자로서 그들의 자기결정과 선택, 수요자로서의 욕구를 강조하는 동반과 자립의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 와 있다(최윤영, 2005 참조).

그런가 하면,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실현의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만큼 장애인 인권 의식과 장애관련 분야들에서의 증진에 선구적인 기여를 해온 국제적 차원의 협약과 선언들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시초로서 인권의식의 국제적 환경변화를 시도했던,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소유를 강조했던 1948년의 ‘UN세계인권선언’과 일명 ‘자유권조약’이라 불리며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권의식 접근을 강조했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DP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비롯해서, 장애인권 관련 국제선언들로서 1971년의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이나 모든 사회활동에의 참여권리 및 국가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강조했던 1975년의 ‘장애인권리선언’, 1982년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특히 취약했

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무장벽 사회구성을 위한 정책 권고를 담아냈던 2002년의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등(보건사회연구원, 2006 참조)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근래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2006년의 ‘UN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통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전반적인 지속유지 노력과 장애현상에 대한 개인-사회적 상호 맥락의 장애인식 패러다임을 각인시킨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참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식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며, 이것은 인권감수성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류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분리·배제·거부 등은 장애를 가진 한 개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 그치지 않고, 소외와 취약에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역할과 이미지의 손상을 가져옴으로써 가치 절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Wolfensberger, 1989) 더 많은 사회적 계층들에 대한 그것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것은 곧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제들이 위협받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회적 위기의 확산과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처 및 예방적 관리체계로서의 인권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그리고 이를 통한 환경의 변화와 인권의식의 신장은 ‘장애사회(handicapped society)’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극의 과정으로서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취약적 요인들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지금까지의 단순하고 소극적인 의미의 사회적 기회평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질적인 삶의 변화가 추구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매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단순히 장애인복지의 시혜차원이 아니라 권리로서 기거이 누릴 수 있고 향유하며 보장받아야 하는 ‘합리적 배려’라는 인식의 배양도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사회, 그것으로 위기가 초래되고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에 대한 성숙한 인권적 잣대가 생산되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장애인 인권관련 논문들은 다음의 조건에 근거하여 선정되었다.

첫째,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검색 가능한 논문만이 포함되었다.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논문을 읽고 코딩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무엇보다 논문의 수집과 획득이 가장 먼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술연구정보화본부 중에서도 학술정보서비스부와 대학정보화지원부에서 운영하여 거의 대부분의 교차서비스지원이 가능한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포착되지 않는 연구물과 각 대학 및 개별기관에 제공되지 않거나 과거의 자

료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회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둘째,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특정 학술지를 선택하거나 연구동향 분석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일반학술지에서부터 등재지까지 폭넓게 포함한 것은 인권관련 연구가 다수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다수의 국내학술지가 일반학술지에서 등재후보지 또는 등재지로 승격 인정되거나,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등재후보지 또는 등재지에서 일반학술지로 지위가 변하는 등의 현상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위에서 이미 제시한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국회전자도서관 두 곳 각각에서 검색 시 제목에서 ‘인권’과 ‘장애’, 주제어에서 ‘인권’과 ‘장애’로 검색어를 두고 이중 검색한 다음, 각기 검색되는 논문과 중복되는 논문을 추려내어 종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장애관련 인권 논문을 검색 및 수집하고자 하였다.

넷째, 1993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1993년이라는 기준을 처음부터 설정한 것은 아니며 인권 연구 중에서도 장애관련 인권 논문이 처음 등장한 해부터 포함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총 95편의 장애관련 인권을 다룬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그 목록은 연구결과와 함께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분류하여 저자 순으로 부록에 제시하였다.

2. 분석기준

본 연구는 국내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연구논문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범주(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대상, 발표연도별 연구물 수, 연구자 수)를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1) 연구주제

인권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법제나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더욱이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정립된 연구 영역에 대한 분류는 아직까지는 살펴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이를 구성하는 연구주제라는 것은 그 범주가 폭넓고 서로 중첩되기도 하므로 이의 분류를 위한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아니지만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을 참고하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의 주제를 차례로 목록화한 다음 보다 큰 범주로 묶어 좁혀나가는 방식과 이를 다시 해체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 법률 및 정책 (2) 인권의식 및 수준 (3) 장애인 인권운동 (4)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5) 심리사회적 재활 (6)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 (7) 사회복지실천 (8) 인권교육 (9) 정신보건환경 (10) 시설운영평가 (11) 장애인복지 변천의 총 11개 범주로 연구주제를 구분하였다.

2) 연구유형

연구의 접근방식, 즉 연구유형에 대한 분류는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초분석 결과 질적 연구가 전체 중 85%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일반적으로 다수 적용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기준(성태제, 2008)에 따라, 양적 연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실험연구, 조사연구, 관찰연구로 구분하고 질적 연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기술적 연구, 역사연구로 그 범주를 1차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역사연구는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의 특성상 분석자료가 법률 및 정책, 또는 장애당사자와 같이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 세분화하였다. 한편, 아직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내에서는 문화기술적 연구, 양적 연구 내에서는 관찰연구가 포착되지 않아 Fraenkel & Wallen(2005)의 기준을 일부 반영하여 문화기술적 연구를 이론이나 지표 등의 근거가 되는 특정준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내용분석 연구로 대체하였고, 관찰연구 대신 기존 유사연구의 통계적 자료를 통합하고 종합하는 메타분석 연구를 추가하였다.

정리하자면, (1) 문헌연구 (2) 사례연구 (3) 내용분석 연구 (4) 실험연구 (5) 조사연구 (6) 메타분석 연구의 총 6가지 연구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거의 동등하게 2가지 이상의 연구유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연구대상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의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규정처럼 특정장애군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전체 장애인을 아우르는 경우가 많고, 인권이라는 것이 장애당사자만을 포함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각 연구대상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임의로 세분화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은 (1) 장애인 (2) 시각장애인 (3) 정신장애인 (4) 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 (5) 근로장애인 (6) 장애인피의자 (7) 장애유아동 (8) 장애청소년 (9) 고령장애인 (10) 여성장애인 (11) 일반학생 (12) 교육현장교사 (13) 장애인관련기관 종사자 (14) 경찰 (15) 장애당사자·관련기관 종사자 (16) 장애당사자·관련전문가·일반인 (17)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일반인 (18) 공무원·교사·의료인·언론인·장애관련기관 종사자로 구분하였다.

4) 연도별 연구물 수

학술지로 분류되는 전문저널 중에서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가 등장하는 국내학술지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발표연도별로 1993년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총 16가지(논문검색이 되지 않은 1994년, 1996년,

1997년, 1998년 제외)로 분류하였다.

5) 연구자 수

연구자의 수는 1인 단독연구에서부터 5인의 공동연구까지 분포하여,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앞선 분류기준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대상, 학술지, 발표 연도, 연구자 수의 변인으로 구분되었으며, SPSS(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의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4. 분석신뢰도

연구논문의 분석은 본 연구자 2인과 박사 수료자인 연구보조자 1인을 두어 총 3인의 코더가 분석항목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합의하였다. 개별적으로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분석기준에 대한 일치도가 90% 수준에 이른 후 분석을 시작하였고, 분석자간 신뢰도는 분석대상 논문의 30%를 3인의 코더가 각각 입력하여 분석자간 신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 94%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마지막 과정에서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추려내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3인의 전체 합의 내지 2인의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결과를 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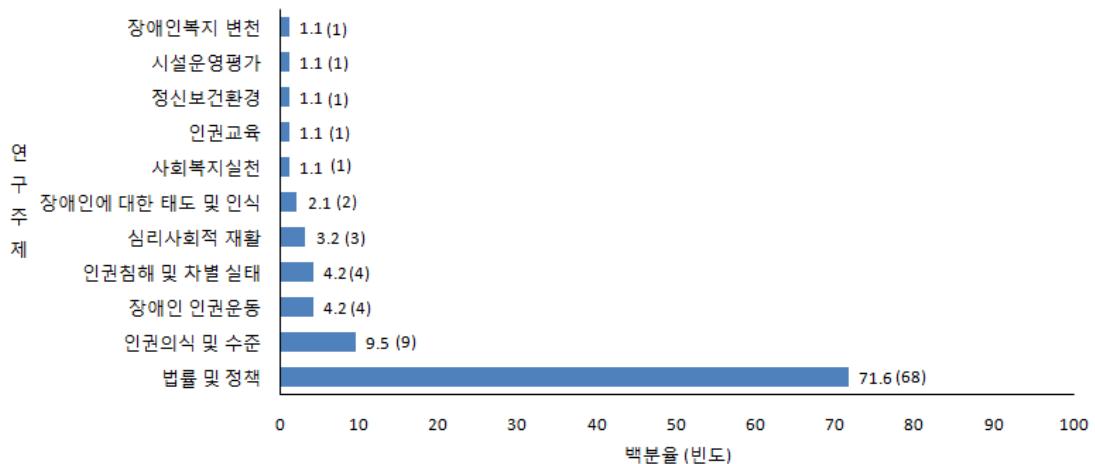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연구주제의 분석결과

연구주제는 11가지의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보다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의 주제는 총 95편의 연구논문 중 법률 및 정책이 68편으로 71.6%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법률 및 정책과 비교하자면 다른 연구주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였다. 순위대로 보면 2위로 9편의 연구논문이 나타난 인권 의식 및 수준(9.5%), 각각 4편의 연구논문이 나타난 장애인 인권운동(4.2%)과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4.2%), 3개의 연구논문이 나타난 심리사회적 재활(3.2%), 2편의 연구논문이 나타난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2.1%),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지실천(1.1%), 인권교육(1.1%), 정신보건환경(1.1%), 시설운영

평가(1.1%), 장애인복지 변천(1.1%)의 연구주제는 모두 각기 1편씩의 연구논문만이 나타났다.

연구주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의 주제가 법률 및 정책에 이렇게 편중된 현상을 나타낸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 내에서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초적 노력과 과급효과의 동인으로서 기대되고 공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제정이나 그에 기반한 국가정책적 기제들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 UN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국내이행 등 최근의 장애인정책의 핵심적 변화를 반영하여 인권을 다룬 연구들이 그중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외에도 장애인관련법상의 다양한 이념과 제도들의 합의를 통한 인권문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보다 미시적인 접근에서의 인권연구 결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천현장에서의 인권문제관련 의식 및 실태 파악이나 인권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의 인권교육이나 환경조성 등과 관련한 주제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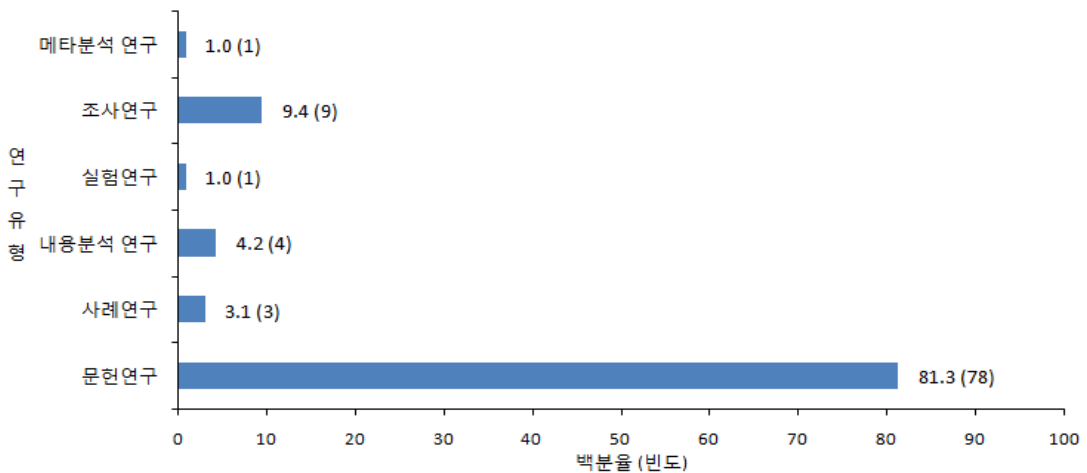


<그림 1>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의 연구주제별 현황

2. 연구유형의 분석결과

먼저 연구의 접근방식에 따라 연구유형을 크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구분하자면, 총 95편의 논문 중 질적 연구가 85편으로 88.5%를 차지하였고, 양적 연구는 11편으로 11.5%에 불과하였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살펴보면 총 95편의 연구논문 중 문헌연구가 78편으로 81.3%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9편의 조사연구(9.4%), 4편의 내용분석 연구(4.2%), 3편의 사례연구(3.1%), 각기 1편씩의 실험연구(1.0%)와 메타분석 연구(1%)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의 큰 비중은 앞서 살펴본 연구주제와 맞물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구주제에서 1위로 집계되었던 법률 및 정책이 대다수 문헌연구로 이루어졌으며 문헌연구의 방식 내에서도 좀 더 분화시키자면 관련법률 및 정책 그리고 제도 등에 대한 고찰을 다루면서 비판연구의 접근방식을 띄고 있었다. 그리고 현장연구의 한 유형인 조사연구가 본 분석결과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1위를 차지한 문헌연구와는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가 다분히 정책적, 이념적 논점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권관련 현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문제를 다루려는 연구적 노력이 경주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보다 다양한 시도가 부족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의 연구유형별 현황

3. 연구대상의 분석결과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인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장애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장애인을 다룬 연구가 전체 총 95편의 연구논문 중 53편으로 55.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정신장애인을 다룬 연구가 11편으로 11.6%를 차지하였으며, 각각 5편의 연구논문이 나타나 5.3%의 비율을 차지한 연구대상은 장애유아동과 여성장애인이었다. 그리고 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3.2%)를 연구대상으로 3편의 연구논문이 나타났으며, 2편의 연구논문이 발견된 연구대상은 근로장애인(2.1%), 장애인피의자(2.1%), 일반학생(2.1%), 교육현장교사(2.1%), 장애인관련기관 종사자(2.1%)였고 1편의 연구논문이 발견된 대상은 시각장애인(1.1%), 장애청소년(1.1%), 고령장애인(1.1%), 경찰(1.1%)이었다. 또한 여러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로 장애당사자·관련기관 종사자(1.1%), 장애당사자·관련전문가·일반인(1.1%),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일반인(1.1%), 공무원·교사·의료인·언론인·관련기관 종사자(1.1%)

지는 5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활복지’에서 5편(5.3%), ‘정신보건과 사회사업’에서 6편(6.3%)의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가 나타나 60개의 학술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각 학술지가 싣고 있는 다른 연구 분야와 비교한다면 인권관련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학회지별 · 발표연도별 연구물 수의 현황

학술지	1993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									1				1				2
2											1						1
3															1		1
4										1							1
5														2			2
6												1					1
7															1		1
8											1		1				2
9													1				1
10								3									3
11													1				1
12								1									1
13									1	1							2
14									1								1
15														1			1
16						1											1
17											1				1		2
18														1			1
19								1							1		2
20											1						1
21									1								1
22													1				1
23														1			1
24								1									1
25														2			2
26												1					1
27									1			1					2
28											1						1
29													1				1
30							1										1
31											1				1		2
32													1				1
33			1														1
34											1			1		1	3
35												1		1			2
36		1						2									3
37										1		1		2	1		5
38	1															1	2
39														1			1
40										1	1	2		2			6

<표 1> 학회지별 · 발표연도별 연구물 수의 현황(계속)

학술지	1993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41				1													1
42						1		1									2
43												1					1
44														1			1
45															1		1
46									1								1
47									1			1					2
48							1			1							2
49											1						1
50											1						1
51													1				1
52															1		1
53									1				1				2
54							1	1							1		3
55								2				1					3
56					1												1
57												1					1
58											2						2
59									1								1
60														1			1
계	1	1	1	1	1	2	3	12	9	5	12	11	9	16	9	2	95

※ 학술지명 1.경제와 사회 2.경찰법연구 3.고려법학 4.공법연구 5.공익과 인권 6.교육문제연구 7.교육의 이론과 실천 8.교정복지연구 9.국가위기관리연구 10.국제인권법 11.국제지역연구 12.기독교사회윤리 13.미국헌법연구 14.민사법연구 15.법과사회 16.법제연구 17.법조 18.법학논총 19.법학연구 20.보훈학회지 21.비판사회정책 22.사회과학논집 23.사회과학연구 24.사회과학연구논총 25.사회보장연구 26.사회복지리뷰 27.사회복지정책 28.성균관법학 29.신앙과 학문 30.아시아여성연구 31.안암법학 32.여성학연구 33.인간발달연구 34.인권법평론 35.인권복지연구 36.장애인고용 37.재활복지 38.저스티스 39.정신건강정책포럼 40.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중앙법학 42.지역사회정신보건 43.지적장애인연구 44.초등특수교육연구 45.토지공법연구 46.특수교육연구 47.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48.특수교육학연구 49.학술논문집(호남대학교대학원) 50.한국경찰연구 51.한국동북아논총 52.한국보육학회지 53.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4.한국사회복지학 55.한국장애인복지학 56.한국지역사회의인권 57.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58.헌법학연구 59.형사정책연구 60.홍익법학

한편 <표 2>의 가로축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는 1993년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4년, 1996년, 1997년, 1998년을 제외하고) 2001년까지는 매년 1편(1.1%)씩, 그리고 2002년에 2편(2.1%), 2003년에 3편(3.2%), 2004년에 12편(12.6%), 2005년에 9편(9.5%), 2006년에 5편(5.3%), 2007년에 12편(12.6%), 2008년에 11편(11.6%), 2009년에 9편(9.5%), 2010년에 16편(16.8%), 2011년에 9편(9.5%), 2012년에 2편(2.1%)이 나타났다. 이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3년까지 어느 정도의 긴 태동기를 보내다가 2004년에 급격히 상승하여 2007년과 2008년을 거쳐 2010년, 2011년까지 비교적 상승곡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해당 시기의 법제도적 변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2004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로부터의 그간의 다분한 노력들이 서서히 법안준비 결과를 내어놓기 시작하면서 제정방향이냐 과제 및 전망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들이 나타나게 된다. 아울러 UN장애인권리협약 탄생과정에서의 기대의미와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도 발표된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6년 말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국내환경에의 영향,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환경변화 및 정책적 분석이 이어지면서 학술적 평가와 의의 및 전망 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특히 정책적 환경의 변화가 연구이슈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 연구자 수의 분석결과

연구자 수 역시 발표연도와 교차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학회지별 · 발표연도별 연구자 수의 현황

연구자 수	1993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	1	1	1	1	0	2	1	10	7	4	9	8	6	11	5	1	68 (71.6%)
2	0	0	0	0	1	0	2	2	1	1	3	1	3	2	3	1	20 (21.2%)
3	0	0	0	0	0	0	0	0	1	0	0	2	0	2	0	0	5 (5.3%)
4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1.1%)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1.1%)
계	1	1	1	1	1	2	3	12	9	5	12	11	9	16	9	2	95 (1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 단독연구는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가 처음 등장한 1993년부터 최근 2012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총 95편의 연구 중 68편(71.6%)을 나타내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인이 실시한 연구는 2001년 처음 등장하여 해마다 1편에서 3편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1인 단독연구와 비교한다면 20편(21.2%)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3인의 연구는 2005년에야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4인과 5인의 공동연구는 각각 2010년과 2011년 비교적 최근에야 등장하였다.

일반적인 연구동향을 볼 때, 많은 연구자가 함께 하는 공동연구가 진행될 경우 논문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는 반드시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진단거나 단일 연구자의 힘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2인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학제적 연구가 도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인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분야에서의 결과는 학제간의 협력과 연구방향의 전환을 꾀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단서로 해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그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최종분석대상은 95편의 학술연구논문들로서 동향분석을 위한 기준 및 분야로는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도별 연구물 수, 연구자 수 등 5개였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본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연구동향에 있어서의 의미와 한계 등을 제시하면서 제언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국내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들은 연구주제면에서 거시적 측면의 장애인관련 법률 및 정책 등에 편중되어 있었고, 이 주제를 다루면서 그들의 인권측면을 이념적이거나 내지 개념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의 인권의식 강화나 증진 및 보장을 위한 기초적 환경조성이라는 일면에서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의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위기에 당면한 장애당사자나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시적 측면의 연구주제들은 상대적으로 그 폭이 매우 좁고 그 빈도 또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미시적 측면의 접근은 정책이라는 거시적 근간에서 가능할 수 있으나 국내연구동향은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권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한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주제는 기존 장애인관련 법률 및 정책들의 다양한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인권이나 차별의 인식 및 태도, 보다 체계적인 인권실태 파악, 장애인의 삶의 현장으로서의 가정이나 복지관, 센터, 학교 등에서의 인권증진 방안 연구들이 진행됨으로써 이념적 측면의 인권인식이 실천적 관점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설계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연구주제가 다수를 이루면서 국내논문들의 연구방법론도 단순화된 경향이 확인되었다. 주로 문헌연구 중심의 이론적 고찰과 비판 및 비교연구의 접근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제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의 방법을 좀 더 다분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특성과 사례에 적합한 조사방법론의 접합과 적용노력 또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기 쉬운 장애인의 인권관련 문제들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결과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관련 연구주제와 연계하여 현장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인지하고 그의 목적성에 맞는 연구 및 조사유형을 설정해야 하며, 일반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교육 적용에 효과적인 실천연구, 실험연구 등이 앞으로 더욱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과 관련한 연구결과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인’이라는 통념상의 기준으로 인권관련

문제를 보편적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단지 장애영유아 및 아동이나 청소년, 중증이나 만성질환의 장애인, 고령의 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등과 같이 장애인의 범주는 다양하고 그에 따른 각자의 당면한 인권관련 인식이나 문제들 또한 집단별로 다양할 수 있다. 일반학생, 교사,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일반회사 직원, 공무원 등 비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범주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곧 실천현장에서의 대상자 특성이나 특정한 개인 및 집단적 환경 등에 따른 보다 전문적인 인권연구 시도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구주제 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법률 및 정책분야에서도 이를 고려한 연구적 접근과 연구방법론적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해당분야의 연구주제 및 대상적 한계성을 극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례로 각 대상자 및 특성 등에 따른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방안 개발연구나 친인권적 환경조성을 위한 주제들에서의 연구들도 앞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연도에 따른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의 수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기의 정책 및 사회적 이슈와 변화가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연구의 경향이 당시 사회 현실과 그 정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적시에 반영해내지 못한다면 학문적 연구나 이론이 갖는 고유의 정통성에도 불구하고 그 유용한 쓰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은 당대의 시대정신이나 가치, 상황 등의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사회적 위기계층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도 그러한 감수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계층의 인권적 위기 등에 대한 문제와 그의 시대적 상대성을 감안한 연구적 기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가 단지 그 시대의 특정 사건이나 사고의 표면적 특성에만 매달리거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당대의 유행이나 이슈만 쫓는,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제언 없는 연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인권관련 연구이슈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이음을 위해 연구자적 책임성도 함께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자들의 활동은 단독진행의 형태가 많았으며, 이는 아마도 사회과학 등의 타연구 영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일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인권과 같은, 특히나 각종 개인사회적 한계상황들과 자주 부딪힘으로써 그 양상이 다소 복잡하고 복합적인 장애인 인권관련 주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장애인 관련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들이 설계와 진행 그리고 평가 등 연구 전반에서 상호협력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학제 간 연구도모를 통해 다양한 연구대상과 주제, 효율성 있는 조사방법 등의 강구와 함께 의미 있는 연구 결과의 도출을 위해 연구자 및 연구영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보건사회연구원. 2006. UN장애인권리협약 연구. http://www.kofod.or.kr/home/bbs/board.php?bo_table=menu64&wr_id=1
- 성태제. 2008.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경준. 2011. 장애이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정책적 대안.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창립 기념 학술 발표회 자료집(2011.5.20). 57-69.
- 최윤영. 2005.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이해와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3: 123-142.
- Fraenkel, J. R., and Wallen, N. E. 2005. *How to Design and Evaluate Research in Education*(6th ed.). New York: McGraw-Hill.
- WHO. 198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Geneva: Author.
- WHO. 1997.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2*. Geneva: Author.
- WHO. 2001.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Geneva: Author.
- Wolfensberger, W. 1989. *Human Service Policies: The Rhetoric versus the Reality*. In L. Barton (Ed.), *Disability and Dependency*. London: Falmer Press.

鄭明宣: 대구대학교에서 재활심리 및 상담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청소년의 주의집중 및 공감 향상을 위한 주제제시 형식의 집단미술치료효과, 2010년 2월) 현재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전공 및 원격대학원 교육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심리사회적 재활, 장애인인권, 척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주요 관심 분야이며, 최근 논문 및 저서로는 “The Effectiveness of an Art Therapy Approach for Diagnosi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Childhood Sexual Abuse: A Case Study(2012)”, “한국판 균형정서공감척도의 타당화 연구(2012)”,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미술치료(2011, 공역)” 등이 있다(coup001@hanmail.net).

李京俊: 독일 쾰른대학교(Univ. zu Köln)에서 ‘한국과 독일의 자조모임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2005), 현재 중부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및 원격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의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인인권 및 복지, 장애인생활안전, 고령장애인, 사회심리재활 등이며, 최근 논문 및 저서로는 “외국의 장애판정제도 고찰: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2011)”, “노인죽음준비교육 활성화 방안: 기독교적 관점에서(2012)”, “장애인복지론(2010)” 등이 있다(Lp2094@hanmail.net).

투 고 일: 2012년 09월 16일

수 정 일: 2012년 10월 08일

게재확정일: 2012년 10월 17일

부록

※ 분석대상 연구논문(총 95편)

2012년 상반기(2편)

1. 송진민, 이요한. 201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인권법평론. 8: 163-187.
2. 임성택. 2012.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128: 7-59.

2011년(9편)

3. 김미옥, 김경희. 2011.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1): 29-55.
4. 김성애. 2011. 일반교육 현장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과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1): 1-25.
5. 남형두. 2011.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회적 모델의 적용. 법조. 60(7): 196-258.
6. 노은호, 주혜영. 2011. 인권문서를 통해서 본 장애유아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1(1): 59-73.
7. 박경신, 김가연, 김성훈, 양송희, 채필규. 2011. 시각장애인웹접근성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61: 131-171.
8. 신옥주. 2011.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토지공법연구. 54: 501-524.
9. 전윤구. 2011.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35: 253-285.
10. 정영선. 2011.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2(1): 131-180.
11. 허창덕, 신주영. 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3): 1-25.

2010년(16편)

12. 강병근. 2010. 장애인권리협약과 성인보호협약이 고령자 보호에 주는 시사점 연구. 홍익법학. 11(2): 285-310.
13. 강희원. 2010. 정신장애인과 기본적 인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5-50.
14. 김영한, 조성민, 최용재. 2010. 특수학급 아동의 인권보호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특성. 초등특수교육연구. 12(1): 23-40.
15. 김원영. 2010. 장애인운동이 발명한 권리와 그에 대한 사법체계의 수용에 대한 연구. 공익과 인권. 3: 207-232.
16. 김정하. 2010. 장애인인권운동의 새로운 동향. 인권법평론. 5: 277-298.
17. 박찬운. 2010. 수사절차에서의 장애인의 인권: 신뢰관계자 동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7(1):

- 111-132.
18. 서미경. 2010. 외래치료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 CTO의 적용기준, 과정, 인권보호방안을 통하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111-140.
19. 서정희. 2010. 장애인의 접근권: 장애인권리협약과 비준당사국의 이행보고서 지침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구. 26(4): 49-75.
20. 손경숙. 2010.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8: 83-114.
21. 송인한, 이한나, 이웅, 정은혜. 2010. 장애인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검증: 인권현안인식과 장애관련 활동경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재활복지. 14(3): 41-67.
22. 이동영, 이상철. 2010. 장애아동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법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국제장애인 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아동 관련법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2): 223-252.
23. 이영미.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여성의 인권. 사회과학연구. 19(1): 17-29.
24. 이은영. 201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소고. 법과사회. 39: 269-297.
25. 차성안. 2010.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원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8: 233-277.
26. 최강희, 박세라, 하종아. 2010. UCC 동영상에 나타난 장애인 인식분석. 재활복지. 14(1): 1-29.
27. 하유정, 송진희. 2010.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호주 지역사회방문자프로그램 (Community Visitor Program). 정신건강정책포럼. 4(1): 98-109.

2009년(9편)

28. 강영실. 2009. 장애인범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고찰. 교정복지연구. 16: 1-19.
29. 김경호, 소순창. 2009. 지방행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선진국의 정신보건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국제지역연구. 13(1): 35-65.
30. 두오균. 2009. 한국 장애인인권의 현실과 재난관리. 국가위기관리연구. 3(1): 26-50.
31. 박혜진, 조영길. 2009. 장애인 재활과 기독교적 소명. 신앙과 학문. 14(3): 135-175.
32. 신은경, 이익섭. 2009. 시민사회 발전과 장애인 인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52: 271-291.
33. 유영일. 2009. 상법 제732조와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 사회과학논집. 17(2): 1-14.
34. 이동영. 2009.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에 따른 장애여성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법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281-308.
35. 이숙진. 2009.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경제와 사회. 84: 230-255.
36. 장명숙. 2009. 여성장애인과 인권. 여성학연구. 19(1): 169-206.

2008년(11편)

37. 김미옥, 정진경, 김희성. 2008.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연구: 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389-422.
38. 김윤태. 2008.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타난 유아분리 의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적장애연구. 10(1): 119-129.

39. 김주연. 2008.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인권복지연구. 4: 131-155.
40. 김형식. 2008.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재활복지. 12(3): 143-170.
41. 나영희. 2008.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389-419.
42. 박남수. 2008. 초등 사회과에서의 장애인 인권교육의 방향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3): 353-371.
43. 서미경, 김재훈, 이진향. 2008.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330-367.
44. 손희권. 2008. 교육에서의 장애 차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한계. 교육문제연구. 32: 143-166.
45. 오혜경. 2008. 인권과 장애인복지실천. 사회복지리뷰. 13: 27-57.
46. 이영미, 탁종연. 2008.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차별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9: 77-111.
47. 이철호. 200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8): 158-175.

2007년(12편)

48. 광노현. 2007. 한국사회의 법치주의와 인권보장: 역사, 현안, 과제. 헌법학연구. 13(3-1): 213-245.
49. 김명수, 정재황. 2007.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19(3): 105-130.
50. 김선정. 2007. 상법 제732조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 78: 165-195.
51. 김택수. 2007. 형사절차법상 장애인 차별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5(2): 238-265.
52. 박세민. 2007. 심신박약자 및 심신상실자의 사망보험가입에 관한 연구. 법조. 56(10): 28-52.
53. 서동명, 윤민화. 2007. 시·도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학술논문집. 28(1): 101-127.
54. 서미경. 2007. 뉴질랜드 정부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64-91.
55. 이영미, 탁종연. 2007.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연구. 한국경찰연구. 6(3): 3-30.
56. 이준일. 2007.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안암법학. 25: 157-181.
57. 이철호. 2007.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헌법학연구. 13(4): 229-258.
58. 정윤모. 2007. 고용촉진을 통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9: 125-149.
59. 차선자. 2007. 장애의 개념에 대한 독일 법학의 논의: 기본법 장애인 조항의 출현을 중심으로. 인 권법평론. 1: 189-210.

2006년(5편)

60. 김명연. 2006.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에 대한 성과와 과제. 공법연구. 35(2-2): 109-134.
61. 유명화. 2006. 장애청소년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지원방안 연구. 재활복지. 10(2): 86-115.
62. 이소영. 2006. 유럽과 미국의 장애인 반차별법. 미국헌법연구. 17(2): 363-397.
63. 정선영. 2006.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3: 59-87.
64. 주혜영, 박원희. 2006.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 인권문제의 유형화. 특수교육학연구. 41(2): 297-319.

2005년(9편)

65. 박정란. 2005. 장애인과 인권.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2): 415-425.
66. 김기홍. 2005.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의 비교 연구. 특수교육연구. 12(1): 3-26.
67. 김정열. 2005.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운동. 경제와 사회. 67: 39-65.
68. 서미경. 2005. 정신보건환경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비판사회정책. 20: 89-117.
69. 유동철. 2005. 한국 장애인운동의 성과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21: 5-33.
70. 이소영. 2005. 美國 再活法(Rehabilitation Act)에 관한 考察. 미국헌법연구. 16(2): 233-260.
71. 이은미, 한상훈, 김지혜. 2005. 여성장애인 피의자의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 방안. 형사정책연구. 64: 63-101.
72. 이익섭, 최정아. 2005.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의의와 한계: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3: 1-27.
73. 차선자. 2005. 장애여성의 차별과 인권보호. 민사법연구. 13(2): 133-166.

2004년(12편)

74. 강동욱. 2004.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21-144.
75. 구혜영. 2004. 클라이언트 중심의 정신보건센터 운영평가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정신보건. 5: 37-61.
76. 김용득. 2004.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과 대안. 담론 모색. 한국장애인복지학. 1: 147-178.
77. 문광삼. 2004. 장애인과 인권. 법학연구. 15(1): 489-514.
78. 박종운. 2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 국제인권법. 7: 51-83.
79. 양옥경, 김충희. 2004.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편견. 사회과학 연구논총. 12: 357-373.
80. 이성봉, 이인영. 2004. 장애인 복지 관련법령의 변천과 문제점. 기독교사회윤리. 8: 1-15.
81. 이익섭. 2004.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 한국장애인복지학. 1: 7-36.
82. 이익섭. 2004. 국제 장애인 권리 조약의 의미와 영향 "from welfare to the rights": 실무그룹 초안 문서와 특별 위원회의 진행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 7: 23-49.
83. 이익섭. 2004.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의미와 전망: 실무그룹(working group) 회의를 중심으로. 장애인고용. 14(1): 5-17.
84. 전광석. 200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방향. 장애인고용. 14(3): 5-17.
85. 한상희. 2004. 장애인 인권의 법적 기초에 대한 고찰: 장애인 인권을 바라보는 한 시각. 국제인권법. 7: 1-21.

2003년(3편)

86. 서미경. 2003.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231-254.
87. 주혜영, 박원희. 2003. 초등학교 통합교육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소고. 특수교육학연구. 38(3): 359-377.

88. 홍석준, 성정현. 2003. 여성 장애인의 정체성과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42: 47-83.

2002년(2편)

89. 김인재. 2002. 障礙人 人權保障의 法的 課題. 법제연구. 23: 31-62.

90. 최말옥. 2002.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증진을 위한 자기옹호프로그램의 효과. 지역사회정신보건. 2: 93-118.

2001년(1편)

91. 김재규, 김현희. 2001. 장애인 차별과 인권. 한국지역사회의인권. 2001(1): 139-167.

2000년(1편)

92. 우주형. 2000.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 2: 489-511.

1999년(1편)

93. 이승미. 1999.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6(2): 103-140.

1995년(1편)

94. 김선규. 1995. 지방장애인의 권익운동. 장애인고용. 16: 100-103.

1993년(1편)

95. 송영욱. 1993. 장애인의 인권. 저스티스. 26(2): 79-94.

Analysis and Suggestions on Research Trends surround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Myung Sun Chung, Kyong Jun Lee

This study examines trends in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total of 95 papers were culled for analysis from 60 domestic journals related to disabled rights dating from 1993 until the first half of 2012. Standards for analysis included themes of research, types of research, targets of research, publication year, and number of researchers. Although there are 11 categories of research theme related to domestic disabled rights, an overwhelming 71.6% of the content is devoted to laws and policies. Research types, also, while divided into 6 categories, were 81.3% document studies. Other disabled related research or actual environmental contexts suggested individuality, but the targets for disabled rights research were the general disabled person in 55.8% of the cases, in which no consideration was given to each disability type. However, it is not necessarily to take it skeptically as it has contributed to the stressing the general importance of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Rather, it implies that the research has to be extended so that it can include human rights practice target to the larger extent. Number of studies, as suggested by the data for research themes and types, tended to rise together with the emergence of laws and then disappear. Number of researchers comprised 5 categories, among which single (1) researchers occupied a high ration of 71.6%, and the recent trend toward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were not appli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domestic research on disabled rights needs to move forward from the existing legal and systemic critiques to more systematic approaches pursuing diversity and harmony, from rights education to practice-based studies.

Key words: person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research trends, crisis of human rights